

“어린이건강, 생태 예방의학 체계 마련해야”

지속가능발전위,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정책과제’ 토론회

이철우 기자 ☒



권오장 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대강당에서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이철우 기자

수(단국대 의대)는 3일 ‘어린이건강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천식, 아토피, 비만 등 환경변화와 관련 있는 질환에 대한 관리대책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대책 ▲식품, 공기, 물, 토양 등 다양한 매체를 거쳐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화학물질에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어린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주최한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어린이건강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제하의 발제를 통해 “어린이는 성장발달 중이기 때문에 유해요인에 대해 특별히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 인구의 사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어린이 건강보호 정책 수립 원칙으로 ▲어린이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어른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취약) ▲형평성(사회계층에 따른 건강·환경오염 물질 노출 수준, 사고 빈도의 차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위해도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위험을 피하기 위한 대안 선택 등) ▲사전예방의 원칙(유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 조치를 취함) 등을 제시하며,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꼭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등을 거론하며 “정부차원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대책이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대책은 주로 안전과 빈곤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알레르기질환, 비만 등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어린이 건강문제는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린이 관련 각종 종합대책은 각 부처의 업무를 모아 종합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목표가 불확실한